

전남도,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총력전

전라남도가 4조 6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그 성과를 가늠할 핵심 관문으로 '화학산업 소제·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설정하고 총력전에 나섰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 보호를 넘어 체질 자체를 혁신하는 '산업 리모델링'이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기존 주력산업을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재편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형 고부가 스페셜티 화학제품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미래형 제조 공정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확보한 정책적 동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과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계 숙원 사업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산업통상부의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번 지정은 단순히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전남이 '글로벌 친환경 고부가 화학산업의 공급망 허브'임을 대내외에 공인받는 핵심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산업부 지원사업 중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정 시 연구개발(R&D) 지원,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실현된다. 이는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인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강력한 엔진이 될 전망이다. 특히 범용 제품 중심에서 가능성 소재 등 고부가 제품군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지역 기업에는 체질 개선의 결정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조6천억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첫 단추 산업부 공모 대응전략 수립·국회포럼 등 전방위 붐 조성 나서



전남도는 3~4월로 예정된 산업부 공모를 앞두고 빈틈없는 전략을 수립 중이다. 전남만의 차별화된 육성 전략을 도출하고, 영커기업과 협력 기업 간 견고한 상생 모델을 설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오는 3월 20일 국회에서 포럼을 열어 전남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 방

안과 특화단지 지정의 당위성을 공론화한다. 포럼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남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전달하고,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미래를 위해 전남이 최적지인지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남의 이번 행보가 국내 제조산업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는 개별 지역을 넘어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이다. 전남의 메가 프로젝트와 소부장 특화단지는 한계에 직면한 범용 소재 중심의 구조

를 고부가 스페셜티 산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소부장 특화단지는 메가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퍼즐 조각"이라며 "산업부 공모부터 국회 포럼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반드시 지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발판으로 전남 화학산업의 제2 전성기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 확대

광주 주소 둔 현역병·상근예비역 등... 별도 신청없이 가입 최고 3000만원 보장...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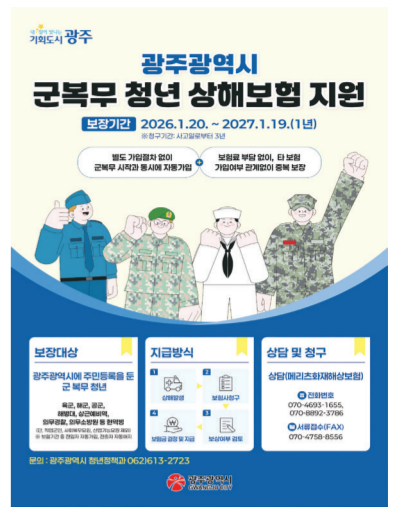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광주 청년들이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다. 다만 보험 제도가 이미 마련된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역 군복무 청년이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해지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애(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일당 3만원) ▲군복무 중 중증장애 진단(1000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3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100만원) ▲수술비(20만원) ▲손발가락 수술비(20만원) 등이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특히 올해부터 군복무 중 사고나 훈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외상에 대한 보장을 확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10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070-4693-



1655)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자치구, 청년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군복무 중인 광주 청년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 누리집 게시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시 청년정책과(062-613-2723)로 문의하면 된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광주 청년들이 안심하고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청년 정책을 지속해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 27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전라남도는 오는 27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시설장비 지원 ▲시군 지역 특화사업 지원, 4개 분야로 나눠 530여 기업에 총 4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27억 원)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다.

특히 올해는 기업 선호도가 높은 인건비에 국비 지원이 재개되고, 도 자체 지원도 확대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시설장비·시군 지역특화사업 4개 분야

530여 기업에 총 49억 원... 지속·안정적 성장과 자립 지원

일자리창출사업은 진입 초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고용 1명당 월 50만~90만 원을 최대 3년간 인건비로 지원하며, 도 자체 지원사업인 전남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일반인력과 전문인력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품질개선,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 홍보비 등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시설장비 사업은 기업이 신규 시설장비를 구입하거나 노후 시설장비 교체 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군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관로 개척, 인지도 제고,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등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에 있는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신청하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전남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시군에서 별도로 모집해 지원한

다. 사업개발비와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지정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나 시군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진식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이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환경이 점차 마련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전남도에서도 기업이 체감할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시, 지역 수출기업에 30억 용자 지원

업체당 최대 3억원... 해외시장 개척·해외인증 획득 등 대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관련 사업에 필요한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용자 지원한다.

용자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 전년도 직접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5년 이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수출 관련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다. 단 최근 2개년(2024~2025)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용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과 관련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용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변동금리)이다.

수출진흥자금 용자 대상으로 선정되면 용자를 받을 때 연 2.12%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금리는 분기별로 조정된다. 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연 1.62%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용자 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돼 있으며,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광주경제진흥은행 일자리재단 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 기업에게 저리 용자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기업들이 급변하는 국제 무역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 지원사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 촉진을 위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385개 업체에 수출진흥자금 742억원을 용자 지원했다. /신종필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 사과